

전북도의회, 오늘 임시회 개회

생활안전 기본조례안·민간위탁동의안 등 71건 심의

전북도의회(의장 송승환)는 오늘, 제 3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의 건 등 안전 심의와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원회 회별 현지의정활동을 펼친다.

도의회에 따르면, 16일과 17일은 이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과 교육감을 상대로 각종 주요 현안과 관련된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있다.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 1일차 16일에는 박희자(비례), 국

주영은(전주9), 성경찬(고창1), 김철수(정읍1), 나인권(김제2)의원이, 2일차 17일에는 김희수(전주6), 김대중(정읍2), 한완수(임실), 강용구(남원2) 의원이 도정 및 교육 전반에 걸친 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4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된다. /고민형 기자

전력거래소, 환경급전 의지 있으나... 기준 초과에도 무대응

조배숙 의원, "법 개정에도 상한제약 발동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

작년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해야 하는 20일 중 7일은 전력거래소가 출력 제한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조배숙 의원(익산시울)은 산업통상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가 상한제약 기준치인 50 $\mu\text{g}/\text{m}^3$ 를 넘는 일수가 20일이었음에도 그중 7일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출력 제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하면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 이하로 제약해야 한다. 출력제약 발동은 지난 해 11월 7일 시범 시행을 실시한 이래, 올해부터 정식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 중 하나이다. 조배숙 의원은 "발전소는 전체 사업장의 0.4%에 불과하지만 전체 미세먼지의 18.7%를 배출하고, 석탄발전소는 발전소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93%를 생산하는 최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라고 짚은 뒤, "석탄발전소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장치 등 환경 설비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출력이 80% 수준이기 때문에, 출력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억제책으로 유용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 의원의 위원으로 있는 국가 기후환경회의에서 올해 9월 7일과 8일 국립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가동을 조정에 찬성한 사람들은 93.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재작년 환경급전을 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고, 작년에는 정부가 석탄발전소 출력제약을 시작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가 측정됐음에도 상한제약이 발동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한제약이 첫 실시된 지난 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초미세먼지가 상한제약 기준치인 50 $\mu\text{g}/\text{m}^3$ 를 넘는 날은 11월에 2일, 12월에 3일, 1월에 5일, 2월에 3일, 3월에 7일 등 총 20일이었으며, 이중 11월 27일(57 $\mu\text{g}/\text{m}^3$), 12월 20일(53 $\mu\text{g}/\text{m}^3$), 1월 12일(58 $\mu\text{g}/\text{m}^3$), 1월 19일(57 $\mu\text{g}/\text{m}^3$), 2월 21일(59 $\mu\text{g}/\text{m}^3$), 2월 28일(62 $\mu\text{g}/\text{m}^3$), 3월 20일(89 $\mu\text{g}/\text{m}^3$)에는 상한제약이 발동하지 않았다. /김진성 기자

유성엽 의원, 중소 건설업체 부담 경감 위한 적정 착공 준비기간 마련 촉구

중소 건설업체가 낙찰 후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적정 준비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대부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착공일이 결정됨으로써 중소 건설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대안신당(가정)) 대표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공사의 경우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제표준 계약조건 FIDIC 규정에 따라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사업의 긴급성 및 조기 준공을 이유로 착공일자를 현장 상황 등

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한 앞당겨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발주한 최근 3년 입찰공고분의 착공 준비기간은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 평균 2.3일, 착공 준비일수는 평균 9.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타 수요기관들은 착공일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문, 공사설계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착공일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로 요구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에 유 의원은 "중소 건설업체의 현실과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계약체결 후 지나치게 단기간 내에 착공일자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

대도시로 빠져나가려는 교사들... 지방 교육환경 악화 심각

박용진 의원 "지방교육 붕괴 막을 대책 마련 시급" 전국 교사 20%가 경기로 진출 희망... 서울·세종 순 충북22%·전북19%→세종, 강원68%→수도권 원해

최근 5년간 수도권·대도시로 옮겨 근무하기를 원하는 지방 교사들의 진출 신청 건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 학생 수도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지방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의 타 지역 진출 신청 현황'에 따르면 다른 지역으로 진출을 신청한 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4112명)였다. 충북(3162명), 충남(3048명), 경북(2861명), 경남(2835명)이 뒤를 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원들의 진출 신청 추세는 현재 소속 중인 지역을 떠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전입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 예로 충북교육청의 경우 경기

도로 진출을 희망하는 교원이 806명이었다. 이어 세종으로 689명이 진출을 신청했다. 이는 서울(406명) 신청자보다 높은 수치다. 신청비율로 보면 충북 진출 신청 인원의 21.8%, 전북의 18.8%가 세종으로 전입을 희망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교사 3명 중 1명이 부산으로 진출을 희망했다. 강원교육청 소속 교원은 전체 신청인원 67.7%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했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6046명)로, 전체 19.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울은 5837명(18%), 세종 3222명(10%), 부산 3141명(9%), 대전 2484명(7%)이 진출을 희망했다. 그러나 ▲강원(247명) ▲전남(349명) ▲충북(486명) ▲충남(564명) ▲경북(684명)의 경우 전입하기를 희망하는 교원 수가

가장 낮았다. 수도권과 대도시 선호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난 셈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교육환경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충북의 경우 2020년 학령인구는 2020년 학령인구의 86.2%에 불과하다. 강원 지역 역시 2020년의 78.2%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농어촌과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승진 가산점과 교육청 차원의 인사업무 부담이 주어진다. 도서·벽지 근무의 경우 월 3~6만원 가량의 수당도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교사들이 근무를 꺼리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교육환경의 열악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방 교육 현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특성과 정책과 지방 교원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어린이합창단과 손하트하는 이 총리 국가보훈처가 중부권 최초로 충북 피신군 문광면 일대에 조성한 국립피신호국원이 착공 8년여 만인 지난 11일 공식 개원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KBS청주 어린이 합창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與, '윤석열 별장 접대' 보도에 신중... 이인영 "사실관계 파악"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날 윤 총장이 윤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부인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음모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강조했으나 해당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비공개 회의에서도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논평도 내지 않을 생각이다. 대검에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 등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병원 의원은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중천씨 1차 조사

수사기록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됐고, 윤 총장도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가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더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윤 총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것도 검증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추측이었지, 검찰이 다 덮어버린 사실을 민정수석실이 알아서 검증하고 민정수석실도 덮었다는 것은 추측에 추측일 뿐"이라며 "단약 검찰에서 덮어버렸다고 하면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았고,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문제는 몰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추천 전주매일 창간

청년 일자리 살리고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 교육, 자립 지원 사업

금융생활 살리고
농민 500만 명 금융활용 / 농민 금융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살리고
전국 200여 개 지역농산물 직거래 / 농산물 직거래

임실군지부 지부장 이승계

오수관촌농협 조합장 정철석 임 실 축 협 조합장 한득수
임 실 농 협 조합장 최동선 임실치즈농협 조합장 설동섭

농가소득 높이고
영농지원 사업 / 농민 소득 증대 및 수익 증대

먹는 즐거움 높이고
농산물 가공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농업기회 높이고
농업인 교육 / 농업인 역량 강화

농촌행복도 국민행복도

살리고 싶고

농촌으로 떠나는 여름휴가는 농촌 경제를 살리고 다양한 체험, 자연 속 편안한 힐링, 깨끗한 먹거리를 통해 국민의 즐거움을 높여줍니다. 올 여름 휴가는 우리 농촌으로 떠나보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